

서민들의 우울한 자화상 2題

먹고살기 바쁘는데, 노후준비? 보험·연금가입 증가세 둔화

보험·연금자산 증가율 매년 하락
 해약 경험 7%... 3년새 0.9%p ↑
 현금·예금 1656조... 7.5조원 늘어
 채권·파생상품 투자자산 급증세

직장인 박모 씨(46)는 최근 눈을 질끈 감고 보험 3개 중 2개를 해약했다. 잔병치레를 자주 하는 탓에 쓸쓸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하나만 놔두고 변액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모두 해약했다. 박 씨는 두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각각 300만~400만 원의 원금 손실을 봤다. 박 씨는 “큰맘 먹고 들었는데 어쩔 수 없다. 다음달 월세를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성화에 방법이 없었다”며 “아내도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 두게 돼 더는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무리다 싶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이 미래와 노후 안전판으로 꼽히는 보험과 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빚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노후 대비 해 힘들게 쌓아온 금융자산을 허물어버리는 가계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보험과 연금 자산은 1228조8120억원이다. 이는 전제 금융자산 3729조6680억원의 32.95%로 현금 및 예금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증가율은 5.49%로 푹 떨어졌다. 지난 2015년 10.31%(이하 보험 및 연금자산 988조2980억원), 2016년 9.18%, 2017년 7.96%로 매년 감소세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당장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의 ‘제15차(2018년)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

르면 생명보험(우체국·수협·축협 등 상품 포함) 중도해약이나 효력상실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 7%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같은 조사 때보다 0.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불경기로 인해 보험에 추가 가입할 의향이 있는 가구도 27%에 그쳤다. 3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 6.6%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연금저축은 한 달 수령액이 생활비커녕 차비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총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366억원) 감소했다. 계약 1건당 납입액은 235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으로 전년 대비 4.5%(1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 총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26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이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이다.

불황의 여파가 커 보인다. 쓸 돈이 없다. 지난해 여유자금(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은 49조3000억원이었다. 가계의 순자금 운용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다. 그나마 있는 돈도 은행에 맡겨두고 있다. 지난해 현금 및 예금은 1656조2900억원으로 전년대비 74조7570억원이 늘었다. 이 중 은행에 카칭해 둔 돈이 1499조1260억원으로 절대적이다.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돈을 굴릴 데도 많아졌다. 채권 투자자산이 156조2700억원(전년 대비 0.63%)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리스크가 큰 파생금융상품 자산은 9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93% 늘었다.

/김문호 정치경제 부장 kmh@metroseoul.co.kr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자산>

(단위:십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금 및 예금	1,254,789	1,362,736	1,481,513	1,581,533	1,656,290
보험 및 연금준비금	895,968	988,298	1,078,996	1,164,839	1,228,812
채권	180,065	181,386	171,325	155,293	156,270
파생금융상품	375	395	751	531	982

(자료=한국은행)

‘빚’ 대물림 방지법 /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박선숙 의원 주최로 ‘빚’ 대물림 방지법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빚 대물림 6500건, 8500억 신용보험으로 채무변제를”

신용보험제 도입 토론회

대물림 7430억, 상속포기 1014억의 ‘7배’ “신용보험 판매 어려운 구조... 가입 저조”

“정부가 취약층 빚 탕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채무감면비율이 적다.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용보험 활성화가 답이다.”

안중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16일 ‘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용보험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보험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출채무불이행이 일어났을 경우(사망, 상해질병 등) 보험사가 남아있는 채무 전액, 일부를 변제해 주는 상품이다.

이날 안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험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는 신용보험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나 인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빚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상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신용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빚의 대물림 건수는 6577건으로

금액은 844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상속포기로 은행의 손실로 처리된 건수는 6315건, 금액은 1014억원이다. 반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못한 부모의 빚을 떠안은 경우는 262건에 불과하지만 채무액은 7430억원으로 7배 이상이다.

다만 안 변호사는 신용보험의 장점이 많음에도 신용보험을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국내에는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고객(채무자)은 대출금상환보장과 유족에게 채무상속방지, 개인 신용위험 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금융기관(채권자)은 부실채권 방지를 통한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대출창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제한돼 있어 판매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제 100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대출 받은 날 전후 1개월 이내 월납 보험료가 대출금의 1/100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체결은 금지된다. 또 대출창구와 보험창구를 분리하고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면 안 된다(끼워팔기금지). 현행 법령 안에서 신용보험이 활성화 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 시키되 부작용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안산·광화문 등 곳곳서 추모... SNS 메시지 줄이어

사망·실종 304명... 세월호 참사 5주기

우리사회 곳곳에서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해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참사’다.

우선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16일 오후 사단법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 재단이 공동주관한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민 등 약 50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시 참사로 희생된 261명의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을 추모하고 안전사회 염원을 기원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등은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억·다짐 릴레이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 미사를 거행했다. 수원교구는 16일 수원가톨릭대학교 임마누엘성당 앞에서 추모 미사를 진행했다.

주요인사들의 추모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

비스)를 통해 “세월호 5주기가. 늘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4@

카드수수료 기습 인상에 통신업체들 ‘강력 반발’

KTOA “근거자료 토대로 협상을”

통신업체들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카드사들이 가맹점인 통신업체들에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 적용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지난달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OA는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이 과도하고 부당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회복시키고 소비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